

## 프랑스대선 · 그리스총선 이후 유로존 위기의 정치경제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eugenech@sejong.org

1999년 출범한 유럽경제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6일 프랑스대선 결선에서는 긴축정책 완화와 경기 부양을 기치로 한 올랑드(François Hollande) 사회당 후보가 현직인 사르코지를 누르고 당선됐다. 같은 날 그리스총선에서는 개혁을 지지하는 집권연합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다득표 3위까지의 정당이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해 오는 6월 2차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올 초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의 유동성 공급 확대, 신재정협약 타결 등으로 진정되는 듯 했던 유럽의 채무 및 재정 위기는 다시 유럽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12년 5월 하순 현재 유로존의 향방은 유동적이다. 그리스의 잔류 여부, 그리스 이탈의 경우 유로존과 세계 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 유로존과 유럽연합(EU)의 미래 등 관련 이슈들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유럽발 불확실성의 증폭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세계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는 금년 상반기에 어느 형식으로든 정리될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면 유로존은 분열하고 유럽은 국제무대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다. ECM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 강화에 성공한다면 유럽은 안정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경제의 강자로 재도약할 것이다.

### 유로존 거버넌스의 취약점

유로화는 2002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했다. 유로화의 도입은 단일통화 도입에 따른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의 감소, 대외신용의 제고 등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었으며 단일 정치체제를 결성하고자 하는 유럽인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유로화의 도입은 회원국의 주권(sovcreignty) 제약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실물경제의 운용에 간섭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을 상실했다. 환율의 거시경제 균형 조정의 기능도 사라졌다.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의 경제 실적이 유로화 환율을 결정했다. 그리스와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회원국은 경상수지가 적자라도 규모가 큰 회원국들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 평가절상된 유로화를 사용해야 했다.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EMU의 출범으로 회원국 간 경제실력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역내 경제불균형은 심화됐고 경상수지 적자 국가의 통화가치는 실력과 달리 고평가됐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정책 수단도 운용의 제약을 받았다. 1996년 EU 회원국들은 당해 연도 재정적자와 누적 국가부채를 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규정한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체결했다.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고 한 회원국의 적자나 부채가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동 협약이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과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막는 데 한계를 보이자, 지난 3월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이 위반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재정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회원국들의 의회 승인이 마무리되면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EU가 통화동맹서 재정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MU의 출범으로 회원국 간 경제실력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며 역내 경제불균형은 심화됐고 경상수지 적자 국가의 통화가치마저 고평가됐다. 독

일과 프랑스가 EU와 유로존을 이끌어 왔으나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를 관리할 궁극적 리더(lender of last resort)는 존재하지 않았다. ECB는 물가안정을 관리하며 유럽위원회와 EU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동체 관련 입법과 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다.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가진 독일은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민주국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유로존은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서 위기가 발생하자 그 수습을 위해 적어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

결국 EU 긴축정책은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해 신재정협약의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다.

### 프랑스대선 올랑드의 당선과 유로존 긴축 정책의 향방

올랑드의 당선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정책협조 및 긴축을 기조로 한 유로존의 재정·통화 정책이 수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됐다. 올랑드는 선거기간 동안 EU의 긴축정책을 비판하고 신재정협약 재협상과 ECB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을 강조해 왔다.

올랑드는 특히 ECB의 회원국 국채 직접 매입을 주장한다. ECB가 조성한 자금을 유동성이 필요한 회원국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개별 회원국의 국가 부채를 공동으로, 실제로는 독일 등 ECB의 대주주들이 매워주는 격이다. 이 같은 구상은 적자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과 자금 공여국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올랑드는 또한 ECB의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 현재 1% 정도인 ECB 기준금리를 더 낮춰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리를 사실상 제로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ECB 관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다.

올랑드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긴축정책이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정면대결을 벌일 힘도 없으며 그럴 의사

도 없다. 프랑스 은행들도 현재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어 독일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유로존 파국의 경우 자국 이익을 위해 유럽통합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망쳤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올랑드도 선거 기간 동안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지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선거 공약은 이행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하기 마련이다.

독일도 프랑스의 긴축완화 제안을 일부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스, 포르투갈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올해 SGP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지난 2년간 EU 회원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집권 세력이 모두 패배했다. 높은 실업률이 가장 문제였다. 유연성을 결여한 긴축재정 정책에 대해 유럽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점차 반발이 커져가고 있는 데 대해 독일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결국 EU 긴축정책은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반영해 신재정협약의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이다. ECB는 물가안정 관리에서 벗어나 실업과 경기 조절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이든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나,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 소득 삭감과 경제 침체로 고통 받을 것이다.

### 그리스 연정 구성 실패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

지난 그리스 총선에서 기존 연립여당인 신민주주의당(신민당, ND)은 108석,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사회당, PASOK)은 41석을 차지해 전체 300석의 37%인 149석 확보에 그쳐 연립정부 재구성에 실패했다. 연금 삭감 등 재정 긴축정책 폐기, 은행 국유화, 그리고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을 주장한 급진좌파연합(SYRIZA)이 52석을 차지해 제2당이 됐다.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정부구성권을 위임받은 3대 다수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정부구성권을 반납함으로써 6월 17일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재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리스의 EMU 탈퇴는 그리스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다. ECB는 최근 자본 건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한 그리스 은행 네 곳에 대해 단기자금 공급을 제한한 바 있으나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희망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하다. 2009년말 재정위기 이후 예금 인출이 계속됐으나 특히 총선 이후 약 12억 유로가 인출됐다. 본격적인뱅크런은 아니더라도 위기 전 2,350억 유로였던 시중은행 예금 총액이 약 2/3인 1,600억 유로로 감소했다.

EU는 처음부터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비전에 힘입어 유지되고 관리돼 왔으며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공동체 정신의 큰 테두리에서 타협과 조정으로 해소돼 왔다.

그리스 국민들은 결국 재선거에서 긴축과 EMU 잔류를 표방하는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긴축도 고통스럽지만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더 큰 재앙이 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인 그리스는 지금까지 유럽위원회, ECB 및 IMF의 약 1,600억 유로 지원 그리고 민간금융기관들의 총부채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0억 유로 상당의 부채탕감 등에 힘입어 버텨 왔다. 현재 국고가 바닥나 재선거 전에 지불해야 할 채권 이자 2억 유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2차 2분기 구제금융 310억 유로는 긴축협약 이행 불확실을 이유로 재선거 이후로 지급이 유보됐다. 유로존 탈퇴의 경우 경제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신(新)드라크마를 발행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기업의 자금난, 무역의 급격한 위축, 물가 급등, GDP 급감 등을 감수해야 한다. 급진좌파연합마저 최근 재협상은 하겠지만 유로존 잔류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 국민의 70%가 긴축에 반대하나 80%는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진좌파연합이 선전해 제1당이 된다면 득표율 1위 정당에 50석을 우선 배정하는 그리스 선거제도로 인해 정부 구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번갈아 집권해 온 신민당과 사회당이 긴축완화 노력을 표방하고 다시 재집권할 가능

성이 높다. 어느 경우이든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할 것이나,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 소득 삭감과 경제 침체로 고통 받을 것이다.

## EMU 경제위기의 전망

유로존의 미래를 두고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만, 누리엘 루비니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예상하거나 권고하고 있다. 씨티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도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보다는 탈퇴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고 부채상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할 가능성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로화 강제가 지속되는 한 그리스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관광업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힘들 것이며,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경유착과 부패 구조가 단기간에 청산되기도 힘들다.

EMU는 유지될 것이다. 그리스의 탈퇴가 곤란한 이유는 우선 EU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정책적 타격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리스 탈퇴는 유로존의 단합에 대한 시장의 회의로 이어져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한 투기가 발생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EU 대국인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뱅크런과 채권가격 폭락을 겪어야 한다. 유로화 가치는 급락하고 디레버리징을 위한 해외투자 회수로 인해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는 혼란과 침체에 빠진다.

<그림 1> 그리스 탈퇴 전망 시나리오 비교



출처: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5/2012051502677.html(검색일: 2012/5/16).

GDP 규모 약 3,000억 달러에 불과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전(全)세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위기 확산 때문이다. 그리스 연정결성 실패 이후 스페인, 이탈리아와 프랑스 은행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자금



경색을 겪는다면 그 영향은 세계적 규모가 된다. 이미 이탈리아는 1조 9,000억 유로, 프랑스는 1조 7,000억 유로, 스페인은 7,100억 유로의 막대한 국가부채를 지고 있다.

독일도 유로존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독일은 산업 경쟁력 덕분에 유로존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메르켈 수상의 과제는 재정적자국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는 독일 유권자를 상대로 구조 조정 비용 분담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것이 될 것이다.

EU는 지역통화안정제도의 신설, ECB 기능의 확대, 신재정협약 적용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이번 위기를 넘길 것이다. EU는 오는 7월 재정위기국 채권을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유로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창설할 예정이다. ECB는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도 업무 목표로 할 것이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ECB는 경기 부양과 채무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현재 2%인 유로존의 물가안정 목표를 높일 수도 있다. EU의 공공부채 비율은 GDP 대비 87.2%로 미국(98%)이나 일본(235%)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유로화는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애초 정치적 고려에 의해 태동했다. EU 제도화의 수준을 높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1951), 로마조약(1957), 유럽통합법(1986), 마스트리히트 EU조약(1991), 그리고 리스본조약(2009) 등은 모두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었다. 지금의 위기도 결국 협상과 조정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EU는 처음부터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비전에 힘입어 유지되고 관리돼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공동체 정신의 큰 테두리에서 해소돼 왔다.

세계화가 더욱 확산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한국이 경제적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려면 정부와 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 유로존 위기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국에 주는 전략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 체질의 강화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채는 약 1,850조원(정부는 직접성 정부채무인 약 420조원이 국가채무라고 주장) 그리고 가계 부채는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각각 2011년도 GDP 1,237조원의 150%와 80%에 해당한다. 공공 부문과 가계 부문의 높은 부채율은 경제 체질의 약화를 의미한다. 실물경제가 약간의 침체만 겪어도 신용 창출과 유동성 확보에 곤란을 겪어 경제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스 건설산업의 붕괴 그리고 스페인 주택시장의 침체가 현재 이들 국가의 위기로 발전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높은 부채율은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신뢰 상실에 따른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상승과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EMU 위기는 산업경쟁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공동의 규칙이 적용되는 유로존 단일통화권은 독일, 네덜란드 등 효율적 정부 및 산업경쟁력을 갖춘 국가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여주었다. 세계화가 더욱 확산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 한국이 경제적 안보와 번영을 도모하려면 정부와 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

끝으로, 한국은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높은 수준의 FTA를 확대해 수출 환경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등 생산자원의 자급이 곤란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FTA를 더 많이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업제품 수입관세가 거의 제로인 일본보다는 거대 신흥발전국 중국과 되도록 빨리 FTA를 체결해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 유지비용과 심각한 소득구조 불평등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아직 제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다른 선진 공업국에 앞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시장 선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최근 유럽경제통화동맹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자원 자립도가 낮아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한국에게 소중한 전략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위기는 정치 건전성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요건임을 말하고 있다.

「정세와 정책」 최근 출판목록

2012년 5월호 (통권 193호)

정성장, “북한 노동당 제4차 대표사회와 파워 엘리트 변동”  
문순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전성훈,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국제정세 · 남북관계 전망”  
진창수, “노다 정권의 과제와 한일관계”  
이명찬, “독도문제와 한일관계의 전망”

2012년 4월호 (통권 192호)

이대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현익,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엄상윤, “김정은체제의 개막과 북핵문제의 향방”  
유현정, “2012년 ‘양회’ 개최 이후 중국정치의 현안과 과제”

2012년 3월호 (통권 191호)

조홍식, “2012년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위기와 자본주의의 미래”  
최재훈, “이란의 핵개발 갈등과 한반도”  
양운철,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전망”  
백학순, “김정은 시대의 남북관계: 현황 · 문제 · 대책”  
정성장, “김정은의 선군정치와 북한의 군부 엘리트 변동”

2012년 2월호 (통권 190호)

이대우, “김정일 사후 북한 정세에 대한 미국의 평가”  
이태환, “김정일 사망 이후 미중과 남북한”  
김성철,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에 대한 일본의 평가 분석”  
정은숙, “김정일 사후 북한: 러시아의 시각”  
오경섭,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국내정세”  
문순보, “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정철호, “정철호, “미국 2012 新국방전략과 한국의 군사 전략 발전방향”

2012년 1월호 (통권 189호)

김성철, “2012년 국제 정세 전망”  
이대우, “2012년 미국 정세와 한반도”  
이태환, “김정일 사후 중국과 한반도 정세”  
이면우, “2012년 일본의 정치 및 외교 전망”  
홍현익, “2012년 러시아 정세 전망과 한반도”  
정성장, “2012년 북한 정세 전망”

2011년 12월호 (통권 188호)

조홍식, “2011 프랑스 G20 회담의 성과와 평가”  
정상화, “유로존 재정위기와 유로화의 미래”  
양운철, “북한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북 · 중 전략게임”  
이종석, “경제정치를 통해 본 2011년 북한”  
박기덕, “2012년의 대선 및 총선이 한국의 대북 ·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  
정상률, “이란 핵문제와 중동분쟁”

2011년 11월호 (통권 187호)

정진영, “한미 FTA 비준게임의 정치”  
이대우, “한미 정상회담 후속과제”  
정철호, “43차 한 · 미안보협의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박창희, “동북아시아 군사력 증강 추세”  
고상두, “러시아 자원외교: 동아시아 시장개척의 고충”

2011년 10월호 (통권 186호)

이태환, “한중일협력과 한국의 역할 -한중일협력 사무국 출범에 즈음하여-”  
강명세, “세계적 불균형의 원인과 세계경제의 미래”  
김기수, “러시아 가스관 계획에서 따져야 할 것들: 국제정치 경제적 해석”  
이면우, “일본의 노다 신내각 성립과 한일관계 전망”  
유현정, “2011년 『화평발전백서』 발간의 배경과 평가”

2011년 9월호 (통권 185호)

이대우, “증가 추세의 자생테러와 한국”  
홍현익,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과 북 · 러 정상회담”  
정상화, “미국 채무불이행 위기 이후 국제경제와 경제안보”  
엄상윤, “6자회담의 재개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오경섭,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과 전망”

2011년 8월호 (통권 184호)

김성철,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중일+미국의 북핵외교”  
강명세, “통상국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김재철, “중국공산당 90년의 빛과 그림자”  
정성장, “북한 군사국방지도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과제”

2011년 7월호 (통권 183호)

전진호, “포스트 후쿠시마(福島)와 한국”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된 대응”  
이종석, “북 · 중 경제협력의 심화: 특징과 함의”  
양운철, “경제지수 변화로 추정된 북한경제 현황”

2011년 6월호 (통권 182호)

송대성,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정책”  
홍현익, “김정일 방중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한석희,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에 대한 분석”  
김충남, “오바마의 새로운 중동정책과 한국”  
마상윤, “빈라덴 사망이후 미국의 대테러정책”  
배병인, “한-EU FTA 비준과 향후 과제”

※ <http://www.sejong.org>에서 출력 가능함

## 세종연구소 학술지 안내

『국가전략』 제18권 2호 | 2012년 여름

### - 목 차 -

#### 특집논문

제19대 총선: 예비경선, 쟁점의 실증 그리고 영남의 분화?	강명세
4·11 총선 평가와 유권자 재편성 고찰	김형준
19대 국회와 한국 외교 담론	김기정

#### 일반논문

중국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 및 사회단체제도 규제완화 동향: 사회단체조례등기법(社会团体条例登记法)을 중심으로	유현정
단국 체계와 동맹 정치	정하용
중국의 '도덕정치문화'와 외교: 핵 인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정경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김열수

## 회원제 안내

세종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회원제를 실시하여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회원가입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http://www.sejong.org))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연간 회원자격이 취득됩니다.
- 연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1년), 120,000원(3년)  
학생회원 : 30,000원(1년), 70,000원(3년)  
기관회원 : 150,000원(1년), 360,000원(3년)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단체평생회원 : 3,000,000원

#### 【회원특전】

연구소 주최 연구행사 초청 / 연구소발행 출판물 무료 제공 /  
기존 출간도서 구입시 20% 할인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 소 : 46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 세종연구소 연구지원 · 홍보팀 |  
연락처 : Tel. 031-750-7612 / Fax. 031-754-0100  
e-mail: [public@sejong.org](mailto:public@sejong.org)

## 정세와 정책 | 2012년 6월 1일

발행인 | 송대성   편집인 | 김성철   편집기획위원 | 강명세, 이태환, 정상화, 홍현익  
편집간사 | 원영주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461-370)  
전화 | (031)750-7614   팩스 | (031)754-0100  
홈페이지주소 | [www.sejong.org](http://www.sejong.org)

\*『정세와 정책』은 세종연구소에서 매월 발간하는 출판물로 주요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세와 정책』에 개진된 의견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